

## 한일관계 재정비 방향과 언론의 역할

제43회 한일편집간부 세미나 한국측 주제발표

때 : 2006년 10월 25일

장소 : 일본 도쿄 프레스센터

주제발표 : 이동관(동아일보 논설위원)

한국 속담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장께서 시간 엄수에 대해서 언급하셨고, 12시까지 마쳐야 하는 관계로 배포해드린 원고를 참고하시면서 제 발표 시간을 시간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발표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별 생각 없이 수락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실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측 참가자들을 보니 한국전문가들이 많으신데 뒷감당을 어떻게 해야 할지 긴장도 됩니다. 특파원 시절 이곳 일본 프레스센터 8층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동아일보 지사가 아사히신문사 안에 있지만 말입니다. 히비야공원 전경이 보이는데, 기사 쓰다 머리 아프면 벤치에서 낮잠을 잤던 기억도 납니다.

지난 10월 9일 서울에서 열렸던 한일정상회담은 언론홍보라는 시각에서 보면 최악의 타이밍에 열린 회담이었습니다. 당일 오전 북한이 핵실험 사실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전 신문이 북한 핵실험 문제로 지면을 뒤 덮었고 평소라면 당연히 게재했을 정상회담과 관련된 사설도 주요지 가운데는 조선일보만이 ‘한일관계 이제 실천이 문제다’라는 제목으로 평소보다 양을 3분의1쯤 줄여 짤막하게 실었습니다.

일본 언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다음날인 10일자 조간신문이 없었던 탓에 정상회담의 내용 초록만 호외 등에 게재했을 뿐입니다. 뒤늦게 아사히신문이 아베 신조(安倍晋三)총리의 역사인식문제에 대한 변신행보를 주제로 12일 “군자표변인가요

(君子豹變ですか)”라는 사실을 썼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다루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중국과 한국을 연쇄 방문해 외교적 성과를 과시하고 싶었던 아베 총리 측으로서는 매우 실망스런 결과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뜻밖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방문에 동행했던 총리 부인 아키에(昭惠) 여사가 펼친 이른바 ‘한류외교(韓流外交)’의 성과였습니다. 아키에 여사가 서울 방문중 한 초등학교를 방문해 수업을 참관하다가 즉석에서 ‘예방주사’라는 책에 실린 동시(童詩)를 또박또박 한국말로 읽은 에피소드가 거의 전 신문에 사진과 함께 상세히 실린 것입니다.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정치면이나 사회면이 아닌 대부분 피플란에 실렸지만, 일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요즘 한국 사람들 정치면 잘 읽지 않습니다. 피플란의 기사는 다 읽습니다.

아키에 여사가 ‘한류 팬’이라는 사실은 진작에 알려져 있었지만 이 기사는 많은 한국독자들의 가슴을 훈훈하게 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동아일보는 이 기사가 나간지 이틀 뒤 12일자에 아키에 여사가, 어머니가 한국인인 친구이자 가수 사와 도모에(澤知慧)의 권유로 한글공부를 시작했다는 文藝春秋 기사를 전재해 크게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뜻밖의 상황전개를 보면서 오히려 북한의 핵실험이 전화위복(轉禍爲福)이 됐는지 모르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핵실험이 없었더라면 한일 정상이 따로 기자회견을 가진 점, 회담장에서 실제 대북관과 역사인식문제로 이견이 빚어졌던 점 등이 아마도 1면 톱 제목으로 불거져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런 내용은 간단히 다뤄진 채 지나갔고 아키에 여사의 민간외교 행보가 더 큰 주목을 받게 됨으로써 한국 국민들에게 정서적 친밀감을 심어준 것입니다.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들도 농담처럼 “아키에 여사의 한류외교가 아베 총리의 정상외교를 압도했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아마도 한류스타인 배용준씨나 박용하씨와 아키에 여사가 만나 대담하는 프로를 TV에서 방영한다면 폭발적인 인기를 모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모두(冒頭)에 정상회담의 뒷얘기를 한 것도 바로 이 에피소드가 오늘 한일관계

의 현주소를 정확히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1만 여명 이상이 오가는 것으로 상징되는 양국관계는 이제 어떤 정치적인 갈등과 대립도 대하(大河)와 같은 민간교류의 힘을 넘어설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 가운데 한일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 사건은 한류 붐과 함께 2002년 한일월드컵 공동개최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개인적 비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월드컵 공동개최가 결정된 것은 1996년 여름이었습니다만, 1년 전인 1995년 여름 한국내의 대표적인 지일파(知日派) 정객으로 여당 대표를 지낸 김윤환(金潤煥) 의원이 일본에 건너왔습니다. 그는 한국에서부터 알던 저에게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한일의 과거사를 뛰어넘는 길은 미래의 이상적 목표를 함께 꿈꾸고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길 밖에 없다. 월드컵 공동개최가 그것이다.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은 정치권 밖에 없다. 일본 정치인들을 만나 설득하러 왔다” 김 전 대표는 실제로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당시 외상, 월드컵 유치의원연맹회장이던 미야자와 기이치 전 총리, 일본 축구협회 관계자들을 만나 정력적으로 설득작업을 펼쳤습니다. 저는 당시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 추진’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기사를 썼습니다.

그러나 엉뚱한 후폭풍이 닥쳤습니다. 우선 본사로 수백 통의 항의메일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주로 내용은 “과거사도 제대로 반성 않고 있는 일본과 월드컵 공동개최를 하려는 것은 ‘친일파(親日派)의 책동’이라는 비난이었습니다. 심지어 회사 내의 상사들조차 일본근무 2년째였던 저를 두고 “일본에 가더니 좀 이상하게 변했다”는 얘기까지 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우연히 취재현장에서 만난 차범근 전 국가대표 감독에게 “월드컵 공동개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매우 신경질적으로 “일본 사람들 작전에 말리는 겁니다. 그런 얘기 하지마세요”라고 저에게 쏘아 붙였습니다. 물론 아사히신문은 당시에도 월드컵 공동유치구상을 지지하는 사설을 썼지만 먼저 유치에 나섰던 일본 내에서의 반응은 대체로 시큰둥했습니다. 자발적인 양국의 노력을 통해 월드컵을 유치한다는 구상은 결국 유야무야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1년 뒤 국제축구정치의 타협의 산물로 월드컵 공동개최가 결정됐을 때 저

는 분풀이를 겸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칼럼을 썼습니다.

“역사적인 한일월드컵 공동개최가 1년 전 한일정치권의 미래지향적 논의의 산물로 결정됐더라면 더욱 금상첨화(錦上添花)였을 것이다. 그동안 양국이 기울었던 물적 심적인 소모도 덜 수 있었을 터이다.”

참고로 김윤환 전 대표는 2003년 신병으로 작고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성사된 월드컵 공동개최 기간 중 한국 국민들에게 감동을 안겨준 것은 예선통과에 실패한 일본이 한국팀을 “아시아 대표로 4강까지 가라”며 응원한 것입니다. 반면 중국 언론은 ‘심판매수 의혹’ 등 한국팀을 폄하하는 보도를 해 한국 국민의 감정을 손상시켰습니다.

이런 월드컵 때의 경험들은 매스컴의 역할과 관련해 저에게 몇 가지 교훈을 안겨주었습니다. 한 가지는 삼각형에 비유한다면 한일관계에 대한 언론의 바람직한 자세는 밑바닥의 두 꼭지점에 서서 상황을 보아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삼각형의 중간 꼭지점에서 양쪽을 내려다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삼각형의 한쪽 꼭지점에만 서있으면 다른 쪽의 입장을 배려할 수 없습니다. 위에서 내려봐야만 균형잡힌 시각을 취하는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 국가관계도 개인관계처럼 ‘좋은 집단적 기억’을 축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서 매스컴의 역할은 실제로 지대합니다.

한일월드컵 공동개최만 해도 미래를 위해 모처럼 정치권이 제기한 자발적인 이니셔티브를 살려가자는 캠페인을 양국언론이 용기를 갖고 집중적으로 벌였더라면 좀 더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좋은 경험’의 축적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해 대부분의 한일 양국 언론은 상황을 좇아가는 보도를 했을 뿐, 상황을 앞서가거나 리드하는 보도는 하지 못했었던 것입니다. 바로 바닥의 한쪽 꼭지점에만 서서 상황을 보았던 것입니다.

일본근무 중 역사적 현장을 취재할 수 있는 행운을 갖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고베대지진을 취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한국 언론인으로서 저의 1차적 임무는 재일동포 희생자들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행정망이 마비돼 있고

대부분의 재일교포들이 일본이름, 즉 통명(通名)을 쓰는 탓에 저는 초등학교 등에 설치된 임시 시체안치소를 찾아다니며 가족과 이웃들에게 재일동포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뒤에 숨은 사연을 취재하고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1920년대 관동(關東) 대지진 때처럼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넣었다’는 식의 유언비어라도 퍼지면 어찌나 하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친족의 불행에 슬퍼하는 일본인들에게 험한 꼴이라도 당하지 않을까도 걱정됐습니다. 그러나 재난의 현장 어느 곳에서나 일본인 피해자 가족들은 “외국기자가 수고한다”며 친절히 응대해 주었고 자기들끼리도 국적을 가리지 않고 위로하고 보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재난의 현장에는 국경(國境)이 없다’는 제목의 현장칼럼으로 쓴 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마침 한국친구를 통해 그 내용을 전해들은 칼럼니스트 후나바시 요이치(船橋洋一)씨가 자신의 주간 아사히 고정칼럼에 전재(轉載)하면서 ‘이웃나라 젊은 기자의 마음 씀씀이(心づかい)를 잊지 말자’고 평을 달았습니다.

마치 제 무용담처럼 돼버렸습디만, 말씀드리려는 요체(要諦)는 언론의 중요한 역할의 하나는 사람이 살아가는 생활의 모습을 편견(偏見)없이 정확하고 진솔하게 전달하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그런 좋은 기억이 축적될 때 한일관계의 앞날도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몇 년간 한일관계는 ‘정치가 민간의 발목을 잡아당기는’ 상황이었습니다. 역사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양국간의 정치적 대립과 갈등은 특히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라는 두 개성강한 포퓰리스트 지도자의 리더십 때문에 한층 더 악화됐습니다.

흔히 최근의 한일관계를 ‘물밑 대화채널이 없다’, ‘달힌 민족주의의 대결로 치닫고 있다’는 식으로 언론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른바 대중(大衆/Mass)이 정치의 주역으로 부상한 점이 더욱 큰 상황변화의 동인(動因)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한일간에 문제가 생기면 물밑채널로 대화해 어느 정도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독도문제가 발생하면 일본 쪽에서 ‘시마네현 의회가 결의한 것으로 정부차원과 관계없는 일인 만큼 문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설명하면 한국 쪽에서도 ‘국내 여론 설득에 문제가 크니 일본정부차원에서 분명히 입장정리를 해달라’는 식의 대화가 가능했던 것이죠. 아마도 자민당 지도부가 해당 지역 의원에게 압력을 가해 어느 정도 막후조정하는 일도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중정치시대에는 이런 일이 불가능합니다. 이제 정치지도자들은 대중을 설득하고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대중이 원하는 것, 대중의 정서를 의식하고 이를 쫓아가기에 바쁩니다. 소신과 철학, 장래를 내다보는 식견과 통찰력있는 정치인보다는 대중의 정서를 추수(追隨)하는 포퓰리스트가 양산(量産)될 수밖에 없는 풍토입니다. 한일관계도 영향을 받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언론도 어쩔 수 없이 과거보다는 선정적인 보도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문독자의 취향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죠. 한중일 3국에서 성격은 다소 다르지만 민족주의적인 정서가 강화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한일관계의 변화, 특히 언론환경 변화는 주지(周知)하시다시피 냉전의 붕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공산주의라는 공동의 적이 사라졌기 때문에 함께 지켜야 할 가치에 대한 공조의식이 희박해진 것이죠. 최근 한일양국간의 갈등의 뿌리에도 역사 인식 문제 뿐 아니라 소위 대북관(對北觀)의 차이가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사태나 핵실험, 일본인 납치문제 등에 대해 한국민과 언론들이 보이는 무덤덤한 반응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일본경험자로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같은 상황변화는 우적(友敵)관계마저도 변화시켰습니다. 사실 냉전시대 한국 정부가 일본 언론 가운데 우군이라고 생각했던 신문은 산케이 신문이었습니다. 반면 사사건건 한국의 독재정권을 비판하고 북한의 김일성 정권을 옹호하는 듯한 논조를 폈던 아사히신문은 반한(反韓) 신문으로 분류돼 특과원들은 감시 대상이었습니다.

심지어 산케이신문 시바다 미노루(柴田穂) 전 논설위원이 1992년 사망하자 당시 노태우 정부는 수교훈장 광화장을 수여했습니다. ‘객관적 보도 및 저술을 통해 양국우호증진에 기여한 공로’라는 것이 공적조서에 적힌 내용입니다. 미노루 씨는 1980년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집중 취재해 그의 좌익행적과 가계(家系)문제를 심층

보도했고 고(故) 김일성주석의 항일활동 날조가능성을 제기했던 언론인입니다. 당시 군사정권에게는 입맛에 맞는 기사를 쓴 셈입니다. 그러나 냉전이 붕괴되고 한국이 민주화된 이후 상황이一变했습니다. 지금 한국정부와 일반국민에게 상대적으로 신뢰 받는 언론은 아사히처럼 진보적 색채가 강한 신문들입니다. 특히 역사인식문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진보적이고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것이 결정적인 원인인 것입니다. 이처럼 이해에 따른 편가르기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언론이 진정한 국익(國益)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 수 있는가를 생각할 때 마다 저는 지난해 독도문제가 양국간 현안으로 불거졌을 때 아사히신문의 와카미야 요시부미(若宮啓文) 논설주관이 썼던 칼럼을 생각하게 됩니다. ‘독도를 한국에 양보해 우정의 섬으로 만들자’는 취지의 글이었습니다. 이 글 때문에 일본 내에서는 우익들로부터 국적(國賊)이라는 비난도 들었다고 합니다만 한국 독자들에게는 이 내용이 전해지면서 “아 일본 내에 저런 용기있는 목소리도 있구나”라는 부러움과 반성을 심어준 것이 사실입니다.

언론의 신뢰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 가지 더 소개해드릴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1982년 제1차 역사교과서 왜곡과동이 빚어졌을 때 조선일보 주일특파원 출신으로 권력실세였던 당시 허문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일본으로 건너왔다고 합니다. 그는 당시 한국 주요언론의 보도내용을 스크랩해가지고 와서 각계 인사들에게 “이것이 한국민의 대일(對日)여론이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본 측 정관계 인사들의 반응은 냉담했다는 것입니다. 당시는 당국이 보도지침을 은밀히 언론에 내려보냈던 군사정권 치하였던 만큼 “신문들이 정부 지시를 받고 기사를 쓴 것 아니냐”는 불신감을 일본관계자들이 보였다는 것이죠. 허씨는 당시 가까운 지인들에게 “언론의 자유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언론에 표출된 것이 진정한 여론임을 다른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으면 기사보도도 전혀 힘이 되지 않는다”고 탄식했다고 합니다. 똑같은 논리로 언론의 논조(論調)가 이미 어떤 특정한 바이어스를 깔고 있다면 신뢰받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진실보도라는 목표를 함께 지향하고 있지만 한국언론과 일본언론에는 기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양국 언론종사자들이 서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고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전 총리가 7명의 애인이 있다거나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가 퇴임하자마자 단골요정의 애인을 만났다는 기사 등은 일본의 경우 주간지에서나 보도하지 주요일간지에서는 보도하지 않습니다.

‘상수도 하수도론’이 일본에서는 자율규제로 작용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한국의 언론은 무엇이든 여과없이 무차별 보도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오프더레코드도 일본 보다는 엄격하게 지키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 좋다 나쁘다를 논하기 이전에 한국의 매스컴의 인프라는 아직도 일본의 전통을 따르면서도 폭로 저널리즘이라는 멘탈리티(mentality)는 미국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물론 6대지가 각각 민방TV를 갖고 안정적인 기반을 갖고 경쟁하는 일본에 비해 3대 주요지가 무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풍토도 작용하고 있고, 언론자유를 억제 당했던 상황에서 벗어난 지 20년이 채 안 된다는 점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일본내 상황에 대해 한국언론의 깊이있는 취재가 부족한 측면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소 다로 외상이 유임되자 한국언론은 아베 총리의 ‘아시아 경시(輕視)의 강성외교기조’가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측근인 나카가와 히데나오(中川秀直) 의원을 외상으로 임명하려다 내년 참의원선거를 의식해 간사장으로 임명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유임시킨 경우라고 들었습니다. 말하자면 아소 외상은 물먹은 썸이지요. 결국 아베 총리가 취임직후에 한중 양국을 방문해 유연한 자세로 경색된 관계의 물꼬를 트리라는 예측을 대부분의 한국 언론이 하지 못했던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심층 취재역량의 부족이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한일문제를 다루는 한국 언론의 자세는 최근 전에 비해 부쩍 성숙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각료들의 물의발언에 대해서도 전처럼 흥분하는 보도를 하지 않는 편입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대일외교전(對日外交戰)을 앞장서 지휘하면서 거친 표현을 쏟아내는 ‘벼랑 끝 외교’를 벌이는 데 대해서는 보수언론이 일



제히 비판을 해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국 내에서는 ‘진보=민족주의 지지’ ‘보수=글로벌리즘 지지’ 라는 모순된 등식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양국관계 회복을 위한 언론의 역할을 가치론적 원론적 측면에 치중해 말씀드렸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실질적인 양국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는 양국언론인의 상호이해증진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우선 언론교류의 질적 양적 확대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이는 ‘상대의 입장을 배려하는 논리’, 앞서 말씀드린 삼각형의 중간 꼭지점에서 상황을 보는 균형잡힌 논리의 확산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저의 경우는 일본에 관한 사설이나 칼럼을 쓸 때 항상 ‘일본 내 지인(知人)중 누군가는 읽을 것이다’ 는 전제를 머릿속에 생각합니다. 적당히 타협하는 기사를 쓰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보더라도 수궁이 가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려면 상대의 얼굴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때 한국 언론에서는 ‘북한과 일본을 때리는 기사는 아무리 심하게 써도 괜찮다’ 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불가능해진 것은 교류가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한일 기자간의 교류가 활발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동아일보사는 제휴관계인 아사히신문과 2002년 월드컵 당시 8개 면을 공동제작하고 스포츠기자와 사진기자의 교환과견근무를 실시했습니다. 지난해 독도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양측 논설위원이 상대국 국민에게 호소하는 공동칼럼을 신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월드컵 이후 다시 축소됐습니다. 언론사 정치부장단간의 교류도 몇 년째 중단돼 있습니다. 외무성의 초청 프로그램 등 기자초청 방문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자들을 초청해 견학시키고 주요 인사들을 만나게해 일본의 입장을 설명하는 도식적인 틀에서 벗어나 제휴 언론사간의 기자 교환근무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신문의 논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부 기자들의 교환근무와 기사교류는 필수적입니다.

데스크들의 자질향상도 중요합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기사를 균형잡힌 시각

에서 볼 수 있기 위해 데스크들의 연수 뿐 아니라 사내 벤츠키아이 등을 서로 활성화해 공부하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요즘은 양국언론사의 한국 일본 담당데스크 가운데 경협이 부족한 사람이 적지 않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미래지향이란 말이 언론이 정치권을 향해 하는 '상투적 문구'(きまり文句)가 돼서는 안 됩니다. 언론이 현실을 뒤따라 갈 것이 아니라 월드컵 공동개최 아이디어처럼 창조적 상상력을 갖고 양국관계 회복을 리드해 나간다는 자세로 어젠다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에게 국적(國籍)은 있지만 국경은 없다'고 합니다. 양국언론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삼각형의 꼭지점으로 수렴해가는, 보편적 가치와 진실 보도를 위해 함께 노력을 기울일 때 양국관계회복의 초석도 다져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얘기는 토론시간의 질의응답을 통해 계속 하도록 하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한일관계 재정비 방향과 언론의 역할

제43회 한일편집간부 세미나 일본측 주제발표

때 : 2006년 10월 25일

장소 : 일본 도쿄 프레스센터

주제발표 : 호리 신이치로(마이니치신문 논설위원)

서울에서 지국장으로 있었던 시간은 김대중 정권 후반부터 노무현 정권 출범 초기를 포함한 4년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보고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핵실험에 대해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북한의 핵실험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있습니다. 북한이 핵보유국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주변국의 외교적인 협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일본과 한국은 무엇을 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라이스 장관이 얼마 전 일본, 한국, 중국,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표면적으로 6자 회담의 조기복귀로 일치를 봤습니다. 그러나 UN 안보리의 각국의 제재 결의에 대한 각국의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한국의 '햇볕정책'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끌고 갈지에 대해 저를 포함한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과 한국간의 연대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테마는 한일 미디어의 역할인데 좀 더 확대하여 영화 이야기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보셨겠지만, 2년 전에 '칠소쿠노 나츠'라는 영화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칠소쿠'는 칠석을 말합니다. 즉, 칠석의 여름이라는 뜻입니다. 이 영화는 자매도시인 부산과 시모노세키가 매년 여름에 개최하는 육상대회에서 만난 한국인 남자 고등학생과 일본인 여고생의 애틋한 사랑을 그리고 있습니다. 해협을 사이에 둔 연애는 부모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시대는 1977년 한일간의 관계가

지금과는 달리 좋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저와 이 영화의 감독인 사사베 기요시는 제 고향인 시모노세키에 있는 고등학교의 동창입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시모노세키에는 재일교포가 많이 살고 있어 편견이나 차별이 있었고 저는 그것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감독인 사사베도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제가 서울에 체류하는 동안 사사베 감독이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일본대사관의 공보문화원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칠소쿠의 나츠'를 상영하여 그 무대 인사를 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감독은 무대 인사에서 '이 영화는 차별을 없애자고 계몽하는 작품이 아니다. 내가 고등학생 때 시모노세키에서 경험한 한국인 차별을 있는 그대로 그렸는데 그냥 리브 스토리로서 봐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관객의 대부분은 한국인이었습니다. 감독은 내심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정치적인 것과는 별도로 한일은 영화나 음악 등 폭넓은 분야에서 교류가 진행되어 문화교류의 벽은 거의 없어졌다고 해도 좋을 겁니다. 이러한 교류야말로 한일 관계의 골격이 되어야 하며 이미 그 토대는 완성되었다고 봅니다. 사사베 감독과 관련 되는 또 하나의 영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2년 전 이야기인데 일본의 문화청이 당시의 '한류 붐'에 질세라 일본영화 상영회 '사랑과 청춘'을 기획하여 서울에서 일본영화 46편이 상영되었습니다. 이 이벤트는 큰 뉴스거리는 되지 않았지만 저는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대규모 일본영화제이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흥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영화제였는가 하면 1965년부터 98년까지 일본에서 제작된 46편의 영화가 한국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었습니다. 왜 1965년부터 98년까지의 일본영화만을 공개하였는가 하면 이것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1965년은 한국과 일본의 외교관계가 수립된 해입니다. 그리고 98년은 한국정부가 일본영화를 포함한 일본의 대중문화를 부분적으로 개방한 해입니다. 거기까지 생각하는 문화청에 감탄했습니다. 일본 문화청은 합법적으로 일본영화를 볼 방법이 없었던 시기에 제작된 일본영화를 모아 한국에서 첫 일본영화제를 개최한 것입니다. 요금은 1000원, 불과 100엔입니다. 즉, 이익을 올리려는 목적은 전혀 없고 거의 무료로 일본영화를 보고 일본을 이해해 주었으면 하는 취지였던 것입니다. 이야말로 민간차

원의 '한일문화 교류'였습니다. 큰 화제는 되지 않았습디만, 한일의 상호이해라는 의미에서는 대성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한국에서 몸소 체험한 노 정권의 마스크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2003년 2월에 발족한 노무현 정권을 2006년 4월까지의 3년간 지켜봐 왔습디만, 노 정권의 마스크 대책에서 몇 가지 '사건'이 있었습디다. 개혁을 내걸고 탄생한 노 정권의 큰 테마 중 하나가 언론개혁이었습디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력신문과의 구태의연한 유착 구조의 타파였습디다. 노 대통령이 휘두른 칼에 신문업계의 동요는 격렬했고 대통령과 일부 유력신문사의 대립 구도가 생긴 것입디다.

노 대통령은 2003년 8월 정부관계자와의 국정토론회에서 '마스크의 특권과 횡포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마스크 비판을 한 것이 소위 '첫 문제발언'이었습디다. 노 대통령의 주된 발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디다. 우선 '마스크는 부당하게 짓밟는다. 개인을 짓밟는 횡포는 결단코 용인할 수 없다', 그리고 '어느 신문물을 읽을 것인지의 선택은 독자에게 맡기라고 하지만 우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져야만 독자의 선택에 맡길 수 있다'. 노 대통령의 마스크 비판 발언은 과거에도 있었습디지만, 이 발언은 지극히 강한 것으로 향후의 대응책까지 제시했습디다. 신문사 이름을 들어 지적하지는 않았습디지만, 비난의 화살은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와 같은 3대 신문사로 향하고 있었습디다. 이에 대하여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대통령의 발언에는 마스크를 굴복시켜 제압하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디다. 동 협회는 또, '대통령은 마스크의 생명이 비판 정신에 있다는 사실에 등을 돌리고 있다'고 비난하고, '이대로는 권력과 마스크의 건전한 긴장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우려도 표명했습디다. 당연히 신문사의 사설도 반론이었습디다. 노 대통령에게 엄격한 논조로 알려져 있는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노 대통령의 마스크에 대한 불만은 위험수위를 넘어서 피해 망상 수준에까지 이른 것 같다'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디다. 또, '우리들은 대통령다운 대통령을 보고 싶고 대통령다운 말을 듣고 싶다. 이 중대한 국면에 마스크와 싸우는 것 이외에는 할 일이 없는 대통령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는 말로 사설을 매듭지었습디다.

노 대통령과 매스컴의 대립은 노 대통령의 '일찍이 과장된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는 경험이 '언론개혁'이라는 정책으로 결부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문의 사설이나 칼럼은 언론의 자유의 근간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서 이른바 성역입니다. 그러나 노 정권과 매스컴의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사실도 성역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내세운 것이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한국 정부의 홍보를 담당하는 국정홍보처의 간부는 '사설이나 칼럼 등 『의견을 반영하는』 기사에 대해서도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하고 있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각 부처에 독려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주목할 것은 부추기듯이 대통령 보도관도 '사설이나 칼럼 등에서 납득할 수 없는 논리를 전개하여 왜곡 보도를 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뜻이다'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설이나 칼럼에도 왜곡 보도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 저로서는 '결국 넘어서는 안될 선을 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해외의 미디어는 이것을 '언론탄압'이라는 시점에서 보도하였고 그 후의 유력 신문과 정권의 대립은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로 인해 유력 신문이 의지를 굽혔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제 친구인 한국인 기자는 '거꾸로 격려가 되었다'고 하고 있어 효과는 없었다고 봐도 좋을 것입니다. 저도 몇 번 청와대로 불려가 기사에 대한 항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항의에는 귀를 기울이고 상대의 말은 들었습니다만, 결국 정정 등은 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의 감시자'라는 본래의 역할을 매스컴이 포기할리가 없어 권력을 옹호하는 매스컴을 소중히 하려는 의도가 보이지만, 저는 그러한 의미의 '언론개혁'은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 정권입니다만 '잘했다'고 평가할만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청와대 기자실의 개방입니다. 이것도 2003년입니다만, 서울에 주재하는 외국보도기관에 청와대의 기자실이 개방되었습니다. 이것은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화이트 하우스의 회견실에서도 외국인기자는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어 그 자유로움은 '세계 최초'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청와대 기자실은 종래는 한국의 보도기관만이 출입했었습니

다. 지금은 외국보도기관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면 기자증이 교부되어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기자회견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3년 8월 시점에서 외국인기자의 등록수는 48사 63명, 한국인 기자는 117사 213명, 내외 합친 합계는 165사 276명이 되었습니다. 저도 자주 기자실에 드나들었습니다. 그 때 생각한 것은 '이것을 계기로 한일의 기자들이 친해져 상호 이해가 돈독해지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기대였습니다. 즉, 이런 것입니다. 일본의 특파원이 청와대의 기자실에 빈번하게 출입하게 되면 많은 한국인기자들과 알게 되어 서로 정보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 즉, 상대 기자가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어떠한 기사를 쓰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토론회도 중요하지만 솔직하게 '고이즈미 수상은 어떤 사람이다' 라든가, '노 대통령의 언론개혁의 진정한 의도는 무엇인가' 등과 같은 이야기꺼리는 얼마든지 있는 셈입니다. 그러한 일상적인 기자교류를 통해 한일간의 이해관계가 깊어지기를 기대했었습니다만, 제 기대처럼은 되지 않았습니다. 일에 쫓겼고 청와대 기자실에서 빈둥거릴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청와대 기자실에서 느낀 점은 담당하는 기간이 길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문사는 1명이나 몇 명의 기자가 5년간의 대통령 임기를 담당합니다. 말하자면 '1정권 1기자'입니다. 한국의 경우 일본보다도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빈번하게 하고 있다는 인상이 있어 청와대 간부와의 접촉도 많고 기자의 이해가 깊어진다는 이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오랫동안 담당하면 일종의 답합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4월에 4년간의 근무를 마치고 서울에서 귀국했습니다. 지금도 자주 '한일 관계는 괜찮은가?'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일본에서 보면 지금의 한국 정부는 '반일'로 비칠 것이고 결코 바람직한 관계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한일 관계는 지금 '보통의 관계'로 되어가는 과도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되돌아보면 지금까지의 한일 관계는 '유착'이라고 할 정도로 애매함이 있었습니다. 올해 초에 공개된 1973년 김대중씨 납치 사건의 외교 문서에서 밝혀졌듯이 당시의 다나카 카쿠에이

수상과 김종필 총리가 회담에서 ‘다테마에’라고 하는 일본어를 사용하면서 사건을 정치적으로 결착시켰습니다. 1960, 70년대의 한일 관계는 한일의 협력 우선이 대전체인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한일 모두 거물정치가가 일선에서 물러나고 정치지도자가 세대교체 됨으로써 서로 암암리에 호흡을 맞추거나 뒷교섭이 용인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노 대통령 측근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본측에서 보면 노 대통령이 어떤 인물인지 모르겠지요. 원리원칙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예요. ‘이렇다’라고 한번 결정하면 타협은 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노 대통령은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해방 후에 출생한 대통령으로서 반일교육을 받고 자란 ‘한글세대’입니다. 그러므로 역대의 대통령처럼 일본어를 하지 못합니다. 일본에 대한 이해도 역대 대통령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과거 한국과 일본의 정치가는 뭔가 문제가 생기면 술을 마시면서 일본어로 이야기하고 ‘결착점’을 찾았습니다. 노 정권은 이제 그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또 한국의 과거 정권은 한일의 역사문제를 쟁점화시키는 것에 신중했던 것 같습니다. 노 대통령을 표현하는 ‘원리원칙대로 행동하는 대통령’이라는 말에는 신세대 대통령으로서 과거와 같은 애매한 관계를 끊고 건전한 관계를 구축하고 싶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 대통령은 작년 3월 1일 일본에 의한 식민지 지배에 저항하는 ‘삼일절’ 86주년 기념식전에서 일본에 대하여 ‘과거의 진실을 구명하고 진정으로 사죄, 반성하고, 배상해야 할 것은 배상하고 화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가령 일본측이 ‘사죄했다’고 반론해도 이것이 노 대통령의 원리원칙인 것입니다.

단지 불과 2, 3년 전까지는 한일간에 담합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2005년 6월 20일의 일입니다. 고이즈미 수상과 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한 뒤, 청와대에서 실시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노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을 총괄해서 (한일의) 역사문제에 관하여 두 가지 극히 낮은 수준의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측의 통역은 ‘극히 낮은 수준’의 부분을 일본어로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극히 낮은 수준’이라는 발언은 일본의 역사교과서 문제나 야스쿠니신사를 대



신할 만한 추도 시설의 건설 문제로서 만족할 만한 합의에 달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불만표명이었던 것입니다. 빼격거리고 있는 한일 관계를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경험 풍부한 한국측 통역이 그 부분을 통역하지 않았을까? 외교관계 자에게 물으니 ‘그것은 단순한 통역의 실수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예정되었던 것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노 대통령은 연설할 때 앞에 놓여있는 연설 원고를 즉흥적으로 바꾸는 일이 많습니다. 한일 관계가 악화되어 ‘외교전쟁도 있을 수 있다’ 고까지 말한 노 대통령인만큼 기자회견에서도 뜻밖의 발언을 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외교통상부는 통역에게 ‘돌발적인 말은 통역하지 않아도 된다’ 고 하는 취지를 전했었다는 것입니다. 하찮은 일로 한일 관계를 더 이상 악화시키고 싶지 않다는 의사표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후의 한일 관계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담합’ 은 이제 더 이상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 대통령을 비롯하여 40세 전후의 청와대 보좌진들은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한국에서의 ‘반일’ 은 아직도 마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됩니다. 역대에 공통되는 일입니다만, 대통령이 ‘반일’ 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하면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노 정권은 반일과 지지율 향상을 결부시키는 일본 미디어의 분석을 싫어하여 반론합니다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단지, 한국에서의 반일감정은 세대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일본 식민지시대에 태어나 자란 60세 이상은 반일감정은 있지만 일본의 좋은 점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반일운동의 한계를 알고 있습니다. 40~50대는 고도성장기에 교육을 받고 경제대국, 일본을 상대로 일로 겨뤘기 때문에 일본은 경쟁 상대라는 의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 관저에서 노 대통령을 뒷받침하고 있는 30~40대의 보좌진들은 아무런 부자유도 없는 시대에 성장한 이 세대는 한국은 이래야 한다는 ‘이래야 한다 이론’ 이 투철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측근으로 기용되는 것이 아닙니까. 대통령의 원리원칙을 존중하는 자세와 상통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군사정권은 민주적으로 탄생하지 않아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군사정권이 체결한 일본과의 과거 청산을 다시 한번 하라’ 는 주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미국이나 소련이라는 초강국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자주'를 관찰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그것이 친북정책을 견지하고 있다는 견해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노 정권의 특수성과 한국 국민의 의식변화를 고려하면 한일 관계는 지금 서로 정면에서 국익을 주장할 수 있는 건전한 관계로 가는 과도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도자와 국민, 또 한일의 미디어가 모두 단합하여 한 장 한 장의 얇은 막을 벗겨가듯이 노력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서로의 체면도 지켜줘야 할 것이고, 서로의 마음도 배려하면서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